



일본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한성원 연구원

OECD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절벽과 인구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다양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은 외국인,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일본의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고령화 대비한 노동인력 부족 해결 방안을 제안함

■ OECD(2019)¹⁾ 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절벽²⁾과 인구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다양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생산가능인구인 15세에서 65세까지의 인구는 2018년 기준 59.8%이며, 신생아 수는 2018년 기준 약 92만 명으로 매년 약 3만 명이 급락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8년 기준 전년 대비 32만 명 늘어난 3,588만 명으로 일본 전체 인구의 28.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임³⁾
-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외국인,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일본의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3년 70만 명에서 2018년 146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일본 전체 노동력의 약 2%만을 차지함(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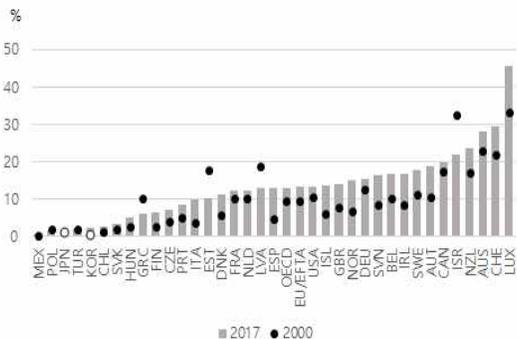
1) OECD(2019. 9. 16), "Labour market reform in Japan to cope with a shrinking and ageing population"

2)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

3) 일본 총무성; <https://data.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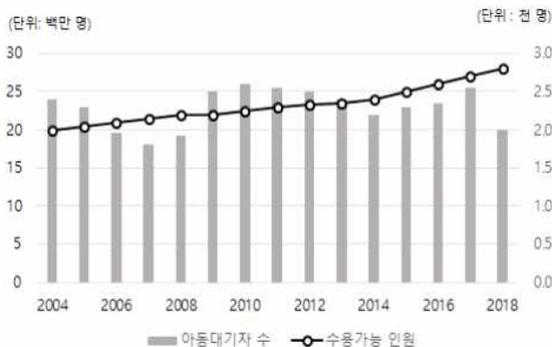
- 외국인 출생자는 2000년 기준 일본 인구의 1.3%에서 2017년 1.9%로 증가했지만, OECD에서 세 번째로 낮은 비중임⁴⁾
- 그러나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일본 정부의 특정기능비자⁵⁾ 도입으로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최대 약 3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함
 - 기존 기능실습비자로 온 외국인은 실습기간(5년)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특정기능비자(2호)⁶⁾는 갱신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을 동반하거나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함
- 일본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의 연장, 정년의 폐지, 계속 고용 제도 도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화 하고 있으며, 정부는 60세 이상 근로자 수와 연장 나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
 - OECD(2019)에 따르면 일본 고령자의 교육 수준 향상, 기대 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55~74세의 고령 노동자 참여율은 2030년까지 6%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일본 정부는 육아와 노동의 양립이 어려운 여성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공급하여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그림 2〉 참조)
 - 2017년에 신경제 정책(New Economic Policy Package)으로 2021년 3월까지 약 32만 개의 보육 시설을 추가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10월에 3~5세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유치원을 공급할 예정임

〈그림 1〉 OECD 외국인 출생자 비중



자료: OECD(2019)

〈그림 2〉 일본의 보육원 아동대기자 수와 수용가능 인원



자료: 후생 노동성, <http://dx.doi.org/10.1787/888933954228>

■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인력 부족 해결 방안을 제안함

- 4) 한국은 OECD에서 5번째로 낮은 외국인 출생자 비중을 기록함
- 5) 건설, 농업, 간호 등 근로자가 부족한 업종의 단순 노동자의 취업을 인정하는 새로운 체류 자격인. 기존 외국인 체류 자격으로 기능실습비자가 있었는데, 특정기능비자를 도입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였음
- 6) 대상 업종은 건설업, 조선·해양산업이며, 가족 동반을 허용하며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 및 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함

- 기업의 정년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⁷⁾ 상향, 계속고용장려금⁸⁾ 신설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장기체류, 가족동반 등 선별적인 혜택도 제공할 것을 발표함 **kiri**

7)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2020년부터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8)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함